

민주,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탄핵 심판 조속히"

“신속 심판으로 위기 조기 종식”... 인사청문 절차 연내 마치고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인사권 남용·특검법 거부 말라”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발빠른 탄핵 심판을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탄핵 심판 피청구인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런 광인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탄핵 소추를 명령했듯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를 명령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처럼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 야권의 독보적인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식선거법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서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전망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가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는 ‘일단 보류’하기로 한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여야는 현재 공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연내 마치고로 가닥을 잡은 만큼, 한 권한대행도 국회의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에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두번째)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면담을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연일 외교·경제 광폭 행보

주한미국상의 인사들과 만남... “대한민국 위기 극복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3 계엄사태’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조기대선’ 준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담당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한 것에 대해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특사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여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북미 회담 실현으로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인사들을 국회에서 만나는 등 ‘민생 경제 안정’에

방점을 둔 행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행보가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정부·여당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의회의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인 것으로 착각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또 다른 권력인 국회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를 대선에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것에 거리를 두는 등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동시에 일어난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형국이라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이 확

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마치 대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도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력 대선주자로서 비호감도가 높다’는 취지의 물음에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대선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삼갔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 의원들에게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 관계자도 “정국 주도권을 가졌어도 야당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이 대표가 정부를 향해 ‘협조하겠다’, ‘돕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현시점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대표의 행보는 조기 대선과 연결 지어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이재명 “국힘, 경제라도 협의체 만들자”

“주도권 가져가도 좋아”... 국힘은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 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제차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개혁신당은 이날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포함된 원내 4개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이는 ‘4+4 정치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

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며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시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해 ‘4+4 정치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모든 원내 정당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제는 협력과 통합의 시간”이라며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 ‘4+4 정치협의체’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6개 쟁점법 재의요구 심의

거부권 시한 21일...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 소집 전망

정부는 16일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덕수 권한대행이 말한 대로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따라 위해 모든 판단을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후 금주 중에 재의 요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중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라며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